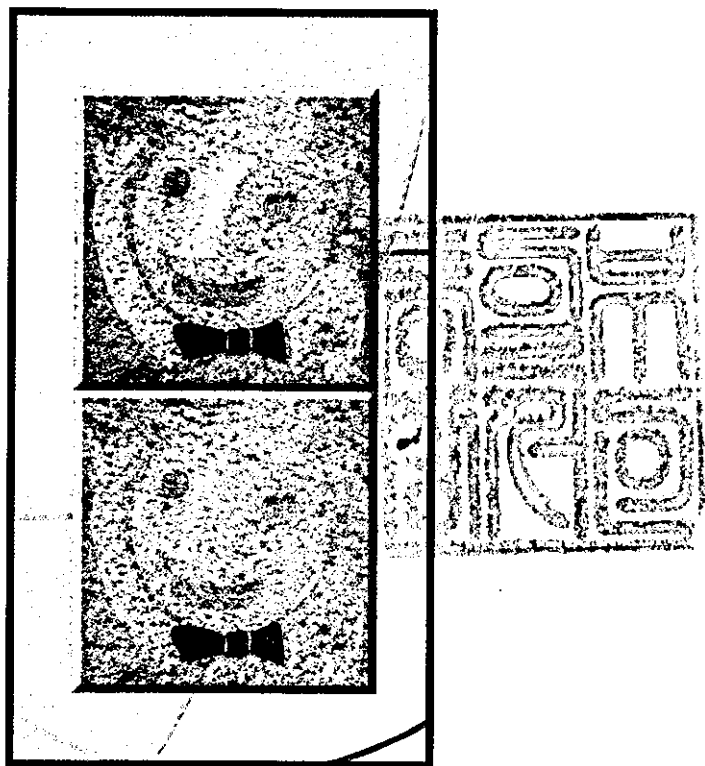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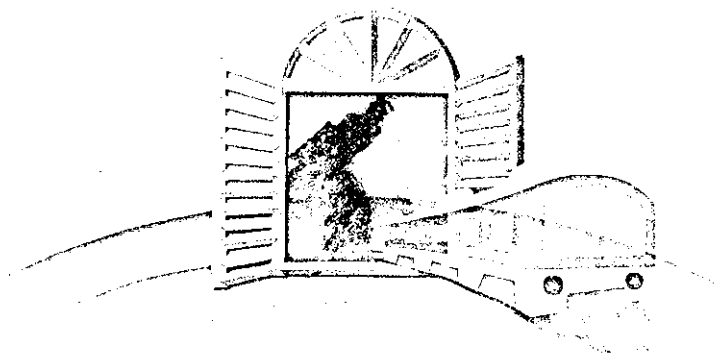


2000년 남북관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00년 남북관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목 차 |

- 남북간 회담이 다양화·정례화 되었습니다. / 7
- 이산가족의 상봉·생사확인 이루어졌습니다. / 17
- 경의선 철도 등 민족공동번영의 터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25
- 남북교역액은 계속 증대되어 4억달러를 상회하였습니다. / 33
- 문화예술 교류 등 남북간 인적 왕래가 급증하였습니다. / 39
- 대북지원의 실질적 효과와 분배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 47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 53
- 남북의 근로자가 함께 경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57
-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책의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 61
-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 67

2000년 남북, “대결에서 화해로”

올해 2000년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매우 뜻 깊은 한해였습니다.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첫 해였으며,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민족에게 어두운 그늘을 드리웠던 분열과 대결을 마감하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시작하는 첫 해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년 6월, 평양에서 분단 55년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민족사에 일대 전환점을 마련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거둔 최대의 결실은 남과 북의 최고당국자가 직접 만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폭을 넓혔다는 것과, 남북 최고당국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5개항의 남북공동선언을 합의·발표(6.15)한 것입니다.

정상회담 이후 반년정도의 짧은 기간동안 남북관계에서는 괄목할 만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북당국간 관계가 과거의 불안정과 불투명을 벗어나 정상화의 궤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남북간에는 평화와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남과 북은 「6.15 남북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틀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은 이제 대결과 갈등의 관계에서 벗어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서로 손을 맞잡는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외관계 정상화 움직임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한반도 냉전종식과정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북의 공동선언 이행 의지와 탈냉전의 국제적 환경 속에서 남북 관계가 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금년에 시작된 남북관계 대전환은 과거로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평가됩니다.

- 남북공동선언 주요내용 -

- ①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추진
 - ②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
 - ③ 8.15에 즈음하여 이산가족방문단을 교환하고, 비전향 장기수 등 인도적 문제 조속 해결
 - ④ 경제협력을 통한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 활성화
 - ⑤ 상기 합의사항의 조속한 실천을 위해 빠른 시일내 남북 당국간 회담 개최
- ※ 적절할 시기에 김정일 위원장 서울 방문

2000년 남북관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남북간 회담이

다양화·정례화 되었습니다.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중심협의체로서 남북 장관급 회담이 네 차례 개최되는 등 정례화 되었습니다.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 정상간 합의에 의해 성사된 당국간 회담으로서, 남북공동선언을 이행하고 남북 화해·협력 관계를 이끌어 가는 중심협의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측의 박재규 통일부 장관과 북측의 전금진 내각 책임참사를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장관급회담은 남북간 제반 현안 문제를 협의하면서 분야별 다양한 회담도 출범시킴으로써 남북간 대화의 틀을 구축하였습니다.

그 동안 남북은 31개항에 합의하였으며, 그 중 25개항은 우리측이 주도적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특히 제4차 장관급회담에서는 6·15 공동선언 이후 진행된 남북관계를 총결산하고 내년도에 추진할 협력사업 구상을 논의하였으며, 그 동안 북한측의 부당한 태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당당하게 대처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동안 네 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통해 합의·발표된 내용입니다.

제1차 외담 (7.29~31, 서울)

- 장관급 외담을 공동선언 정신에 부합되게 운영
- 2000년 8.15를 계기로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업무 재개
- 8.15에 즈음, 남과 북, 해외에서 각기 지역별로 공동선언 지지·환영 및 실천을 위한 전민적 결의를 모으는 행사를 진행
- 종련 동포들이 방문단 구성, 고향 방문
- 경의선 철도의 연결문제 협의

제2차 외담 (8.29~9.1, 평양)

- 이산가족 방문단 두 차례 추가 교환 및 서신교환
- 군사당국자외담 추진
- 경제협력 관련 제도적 장치 마련 및 대북 식량 차관 제공 검토
- 경의선 철도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개설
- 임진강 수해방지사업 공동추진
- 백두산-한라산 교차관광 실시(100명 정도 규모)

제3차 외담 (9.27~30, 제주)

- 기존 합의사항의 차질없는 이행, 앞으로의 실천적 사업들을 계속 협의, 성실이 추진
- 생사확인·서신교환, 면회소 설치 등 조속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조치에 당국간 협력
-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협정과 함께 분쟁해결절차와 청산결재제도 마련 문제도 빨리 타결하기 위해 협력
- 남북경제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협의·설치
- 서울·평양 정기 친선축구대회 개최 및 교수·대학생·문화계 인사 상호 교환 협의·결정

제4차 회담 (12.12~16, 평양)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구성·운영 : 2000년 12월말 1차회의 개최, 전력 협력, 철도 및 도로 연결, 개성공업단지 건설, 임진강 유역 수해방지 추진 문제 등 당면한 경제협력문제 협의·해결
- 어업 부문 상호 협력 : 북측의 동해어장 제공문제 관련 협의
- 남북 태권도 시범단 교환 : 해당 단체에 접촉 권고
- 생사·주소확인 및 서신교환 시범 실시 : 생사·주소 확인은 2001년 1·2월(각 100명), 서신교환은 3월(각 300명)
- 3차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을 2001년 2월말 실시
- 북측의 한라산 관광단 2001년 3월, 경계시찰단을 2001년 상반기 파견
-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정산결제, 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 발효 절차 거쳐 상호 통보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와 전쟁 방지 논의를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휴전선 지역에서 상호 비방·중상이 증진되었습니다.

이어 우리측 조성태 국방장관과 북측의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9.25 ~ 26, 제주)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남북은 6·15공동선언 이행을 군사적 분야에서 보장하고,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록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방장관회담에서의 주요 합의사항입니다.

국방장관회담 합의사항

- 6.15 남북공동선언 이행, 민간인 왕래와 교류·협력 보장 관련 군사적 문제 상호 적극 협력
- 군사적 긴장완화, 한반도 평화 이룩, 전쟁위험 제거 공동 노력
- 남북 철도·도로 연결공사 관련, 쌍방 실무급 외담 추진
- 철도 도로 주변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남북관할 지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정전협정에 기초하여 처리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에 따라, 군사실무회담이 판문점에서 세 차례 개최(11.28, 12.5, 12.21)되어,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과 관련한 군사적 문제를 협의하였습니다.

쌍방은 비무장지대내 남북관리구역 설정문제와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도로 개설에 따르는 군사적 보장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실무접촉이 개최되어 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측 이근경 재정경제부 차관보와 북측의 정운업 북한 무역성 지도국장을 수석대표로 한 남북경협실무접촉이 두차례 개

최되었습니다. (1차: 9.25-26 서울, 2차: 11.8-11 평양)

남북은 경협실무접촉에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해결절차 등 4개 합의를 타결하고 가서명하였으며, 「식량차관제공 합의서」(인도·인수절차 포함)도 체결하였습니다. (9.26)

※ 4개 합의서는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공식 서명

북한의 김용순 특사가 우리측을 방문하였고, 현안문제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북한의 김용순 특사는 우리측을 방문(9.11~14),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15 공동선언에 대한 실천 의지를 김대중대통령에게 전달하였으며, 각종 문화·산업시설도 둘러보았습니다.

김용순 특사의 방문을 통해 남북은 현안문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다음과 같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특사 방문시 합의사항

- 가까운 시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 방문, 이에 앞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서울 방문
- 국방장관회담 개최문제가 논의되는데 대해 환영
-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작업을 9월중 시작, 생사가 확인된

사람부터 서신교환을 우선 추진하고 9.20 적십자회담 개최

- 남북경협실무접촉을 9.25 서울 개최, 제도적 장치 타결
- 빠른 시일내 경의선 철도 · 도로 연결 기공식 개최
- 북측의 경제시찰단을 남측에 파견
-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을 위해 남북 공동조사 실시 등 추진

남북적십자회담이 두 차례 개최되어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측 박기륜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과 북측 최승철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남북적십자회담이 두 차례 금강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1차: 6.27~30, 2차: 9.20~23)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및 시범적으로 이산가족의 생사·주소 확인, 서신교환을 실시하는 문제에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이 두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운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하였으며, 제3차 적십자회담이 열리면 구체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것입니다.

다음은 적십자회담의 주요 합의사항입니다.

제1차 적십자회담 합의사항

-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이산가족방문단은 8.15~8.18 (3박4일) 동시 교환(서울, 평양)
-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 면회소 설치·운영 등 구체적 사항은 비전향장기수를 전원 송환하는 즉시 적십자 회담을 열고 협의·확정
- 비전향장기수 송환: 남측은 북으로 갈 것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전원을 2000년 9월초에 송환

제2차 적십자회담 합의사항

- 이산가족방문단 추가교환: 100명씩 2회
- 생사·주소확인: 시범적으로 9월 100명, 10월 100명
- 서신교환: 시범적으로 생사·주소 확인된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 점차 규모 확대
- 면회소 설치·운영: 제3차 적십자회담에서 구체적 절차 문제 협의

남북정상회담을 포함, 남북간 회담이 총 25회 개최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남북정상회담 개최 합의 발표 이후 남북간에는 각종 회담이 열세 차례나 개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세 차례의 특사접촉(3.17~4.8, 중국)과 다섯 차례의 남북준비접촉(4.22~5.18,

판문점), 통신·보도 실무접촉, 의전·경호 실무접촉, 그리고 남북정상회담을 모두 포함하면 총 25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한해동안 남북차관급당국회담이 단 두 차례 개최된 것에 비해 급격히 증가된 것이며, 회담도 다양화·정례화된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회담 개최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남북회담 개최 현황]

1998	1999	2000
총 2회	총 2회	총 25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당국대표회담(1회) ■ 대북 구호물자 제공관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1회) ※ 4차 회담(2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차관급당국회담(2회) ※ 4차 회담(3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북정상회담(1회) - 남북특사접촉(3회) -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5회) - 통신·보도 실무접촉(2회) 의전·경호 실무접촉(1회) ■ 남북장관급회담(4회) ■ 남북국방장관회담(1회) - 남북군사실무회담(3회) ■ 남북경제실무접촉(2회) ■ 남북적십자회담(2회) ■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1회)

2000년 남북관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

이산가족의 상봉·생사확인
이루어졌습니다.

이산가족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올해에도 정부는 이산 1세대의 고령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 이산가족문제를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 남북 당국간 합의를 통해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합의하였고, 이후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6.27~30)에서 이산가족방문단 교환 및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고, 이에 따라 8.15~18 제1차 남북이산가족방문단(남북 각각 100명)이 교환되어 총 1,170여명이 상봉하였습니다.

※ 남측 100명→ 218명 평양 상봉,
북측 100명→ 750여명 서울 상봉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9.20~23)에서 이산가족방문단 연내 두차례 추가 교환, 시범적 이산가족 생사·주소확인, 서신교환 실시, 그리고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문제를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협의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1.30~12.2 제2차 이산가족방문단(남북 각각 100명)을 교환하여 총 1,020여명이 상봉하였습니다.

※ 남측 100명→ 254명 평양 상봉,
북측 100명→ 770여명 서울 상봉

한편,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12.12~16)에서는 북측의 사정
으로 미루어진 이산가족 교류 일정을 2001년으로 재조정하였
으며, 이에 따라 2001년 1월과 2월에는 생사· 주소 확인(남북
각기 100명), 2월말에는 상봉(남북 각기 100명), 3월에는 서
신교환(남북 각기 300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제2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2001년에 이
산가족 상봉면회소가 설치되면 이산가족문제가 제도적으로 해
결 될 것입니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도 증가했습니다.

한편, 남북 당국간 해결노력과 병행하여, 제3국을 통한 민간차
원의 이산가족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는 2000년에 (11월 말 기준) 생사
확인 434건, 상봉 143건이 성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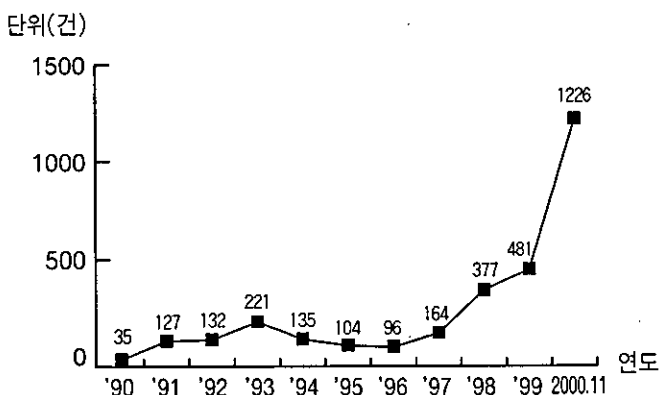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98년 3월부터 2000년 11월 말 현재
까지 현황을 종합하면, 생사확인 1,268건 및 상봉 434건으로
10년간 생사확인 실적의 55%, 상봉 실적의 73%를 차지합니다.

한편, 민간차원에서 순수 이산가족 상봉을 목적으로 한 방북이 '98년 최초로 성사된 이후 2000년 11월말 현재까지 10건이 성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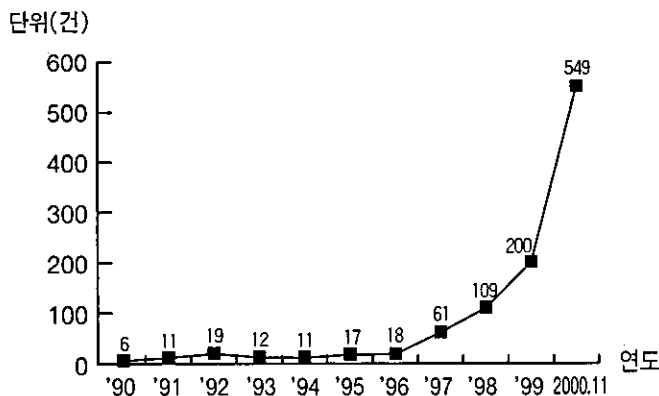
당국 및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상봉 실적을 '90년 이후 2000년 11월 현재까지 종합해보면 표와 같습니다.

[이산가족 교류 동향 변화 추이]

① 생사확인 (2000. 11월말 현재)



② 상봉 (2000. 11월말 현재)



한편, 정부는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산가족 교류를 돕기 위해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0년 3월부터 생사확인의 경우 80만원, 상봉의 경우 180만원을 지원하고 교류 지속에 따른 경비 40만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납북자, 국군포로 등 특별지원대상자에게는 일반인 보다 2배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경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산가족교류촉진지원계획」(3.2)에 의거 교류경비지원금 증액 및 지원횟수 확대(생사확인 40→80만원, 상봉 80→180만원, 교류지속 40만원, 지원횟수 1회→3회)
- 특별지원대상자(납북자가족, 국군포로가족, 생활보호대상자, 70세 이상의 경로연금수령자)는 2배 지원

또한, 정부는 이산가족의 교류를 돕기 위해 행정 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2000년 3월부터 이산가족의 경우 북한주민접촉 승인 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이산 1세대는 나이에 관계없이 신고만으로 북한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산가족과 관련된 자료가 통합 전산화되어, 1999년 6월부터 인터넷(<http://reunion.unikorea.go.kr>)을 통한 이산가족

찾기 신청서 작성이 가능해 졌으며, 앞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이산가족 편지사연 공개 등도 가능해 질 것입니다.

이산가족관련 행정서비스 개선 내용

① 이산가족교류에 따르는 제반 절차 간소화

- 이산가족의 북한주민접촉 승인기간 연장(2년→5년)
- 신고만으로 북한방문 가능 대상 확대(60세→모든 이산1세대)
- 인터넷을 통한 이산가족찾기 신청 및 접수(총 10,428건)
- 신청서류 간소화(74개 항목→28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

②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운영

- 이산가족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 ※ 이산가족 데이터 11만여건 확보 활용, 이중 6.15 이후 신청자는 7만여명
- '99.6월 인터넷 서비스(<http://reunion.unikorea.go.kr>)개시

국군포로·납북자도 이산가족의 범주에 넣어 북한측에 끊임없이 송환을 촉구해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들을 '넓은 의미의 이산가족'에 포함시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측이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해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북한측은 국군포로 문제의 협의를 거부하고 있고, 납북자의 경우도 '자유의사에 의한 월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당장 해

결점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에 국군포로(확인된 인원 350여명) 및 납북자(파악된 인원 487명) 출신이 엄존해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남쪽으로 돌아오겠다는 사람들의 송환을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측은 그 동안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이들의 송환을 끊임 없이 북한측에 촉구하여 왔으며, 다른 이산가족과 마찬가지로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 및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0년 12월 1일, 제2차 이산가족 교환방문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한 김삼례(73)씨는 1987년 1월 서해상에서 조업중 나포된 동진 27호 갑판장이었던 아들 강희근(49)씨를 만났습니다.

이는 납북자 가족으로는 처음으로 상봉한 사례로서,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2000년 11월말 현재 국군포로는 총 16명이 귀환하였는데, 이중 14명이 '98년 이후 들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2000년 남북관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3.

경이서 철도 등 민족공동번영의

터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 개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북은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간 경의선 철도 연결 및 문산-개성간 도로개설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어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철도 및 도로공사를 위한 비무장지대 출입 허가 및 안전보장에 합의하였습니다.

2000년 9월 18일, 우리측은 경의선 철도 연결 및 개성-문산간 도로 개설 착공식을 가졌으며, 비무장지대 지뢰제거 등에 착수하였습니다.

- ※ 남측 공사구간은 철도 12km(문산~군사분계선),
도로 6km(통일대교~군사분계선)이며,
북측구간은 12km(군사분계선~개성)임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문제 관련 세부사항들을 협의하였으며, 조만간 합의에 이를 예정입니다.

경의선 및 문산-개성간 도로연결은 남북교류가 늘어나고,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남북간 물류비용의 약 1/3이 감소되는 등 경제적 측면과 함께 민족의 대동맥 연결이라는 역사적 의의가 있습니다.

나아가, 아시아와 유럽간 철의 실크로드 형성, 대륙과 해양을

있는 세계 물류의 중심기지화 등 21세기 세계 속의 한반도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진강 공동 수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임진강 수해방지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합의하였고, 제4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남북 쌍방은 2000년 12월말부터 가동되는 남북경제 협력추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남북한이 공유하는 하천을 함께 관리·이용하여 자연재해를 막는다면, 매년 발생하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임진강 유역 홍수로 인한 피해 사례(1999년)

- 남측 : 이재민 25,000명, 사망자 10명,
농경지 23,000ha 침수
- 북측 : 주택 붕괴 수만호, 도로·철도 침수 수백km,
농경지 침수 수십만 정보
(북측은 정확한 통계 숫자 미발표)

자동차 수리·개조공장 등이 건설되었고 개성공단도 추진중입니다.

2000년에는 정부의 「정경분리 정책」과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에 따른 절차 간소화로 다양한 분야에서 경협이 성사되었습니다.

또한, 대북투자 진전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사업이 가시적인 성과 도출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평화자동차」의 남포 자동차 수리·개조공장이 준공되어 가동중에 있으며, 2단계 자동차 조립생산공장 건설에 착수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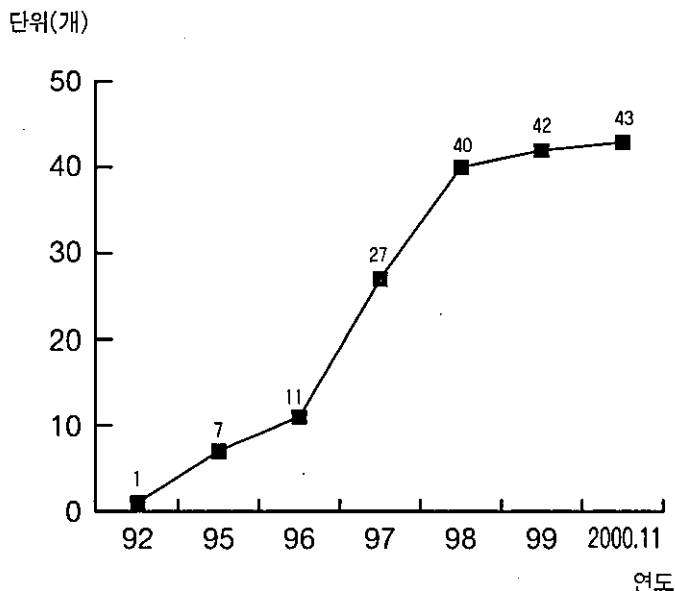
「태창」의 금강산 샘물 합영공장이 2000년 3월 준공되어 제품을 생산, 7월부터 국내에 판매하고 있으며, 「녹십자」의 혈전증 치료제 합작공장도 가동중에 있습니다.

한편, 개성공단 사업은 2000.8.22 현대아산과 북측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공단조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남북경협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줄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제옥수수재단의 신품종 옥수수 종자 개발사업 등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농업분야의 협력사업도 원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2000년에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1건에 대해 협력사업자 승인을 하였으며, '92년 이래 2000년 11월말 현재 까지 43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중 4건은 승인 취소)

[연도별 협력사업자 승인 주이(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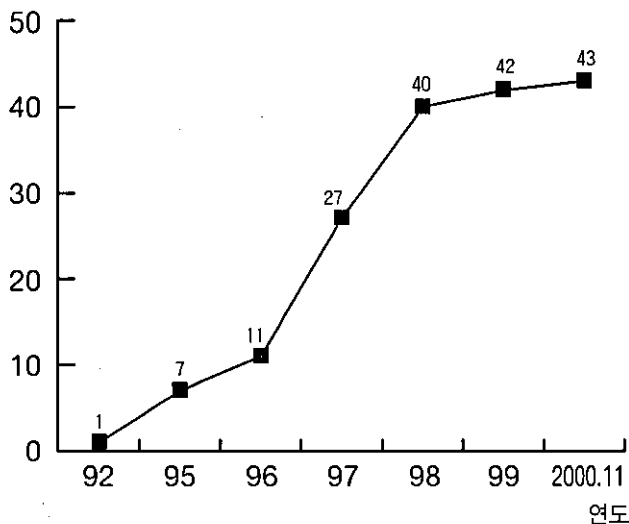


협력사업은 2000년에는 삼성전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평화 자동차조립공장 건설사업 등 2건이 승인됨에 따라 '95년 이래 11월말 현재까지 18건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승인된 경제협력사업 총 18건 중 11건이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승인된 것입니다.

[연도별 협력사업 승인 추이(누계)]

단위(개)



금강산은 관광기반시설개발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개발사업은 분단이후 최대규모의 협력사업으로서 '98년에 성사되어 남북한간 인적·물적 교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한 사업주체들이 장기간을 요하는 사업을 함께 협의·추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관광기반 시설 개발사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남북간 합의서가 채택되고, 경영의 규제도 완화되었습니다.

2000년 11월에 개최된 제2차 남북경제협실무접촉에서 남북은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대한 4개의 합의서를 타결·가서명하였고, 12월에 개최된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서명하였습니다.

이처럼 남북이 경제와 관련된 4개의 합의서를 타결한 것은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경제교류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민족의 복리와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대북경제협력 기업에 대한 대출, 체육 및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지원, 대북 식량 및 비료에 대한 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경제협과 관련하여, 수시방북제도 확대 시행, 승인대상품목 축소, 협력사업자·협력사업 동시 승인제 도입 등 교류협력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민간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대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입니다.

2000년 남북관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4

남북 교역액은 계속 증대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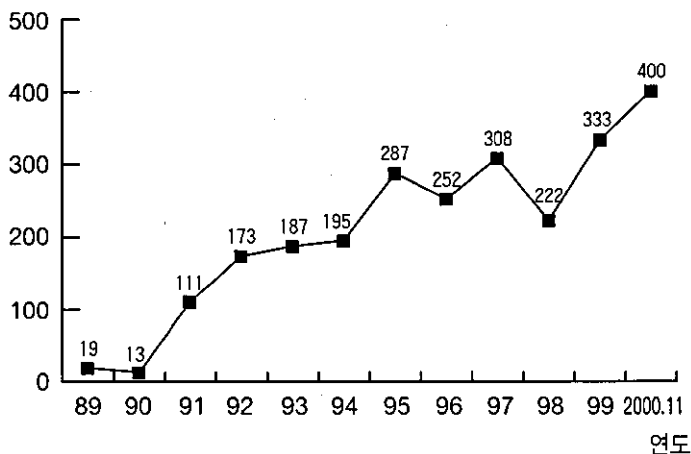
4억 달러를 상회하였습니다.

2000년 11월말 현재 남북교역액이 4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12월말까지 약 4억3천만 달러에 이를 것입니다.

남북교역은 '89년 약 1,800만달러 규모로 시작되어 '91년 1억달러, '95년 2억달러, '97년에 3억달러 규모로 성장, 점진적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연도별 남북교역액 변동 추이]

단위(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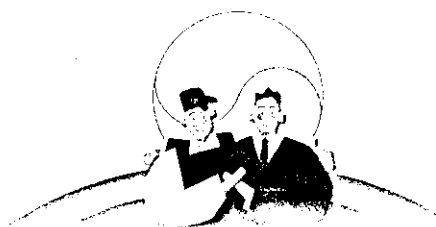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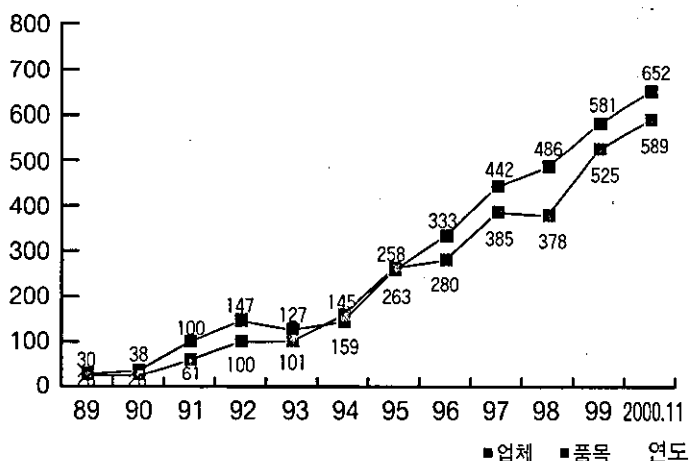


남북교역에 참여한 교역업체 수와 교역품목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교역 품목의 경우 '89년 26개에서 2000년 10월말 현재 589개 품목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연도별 교역업체와 교역품목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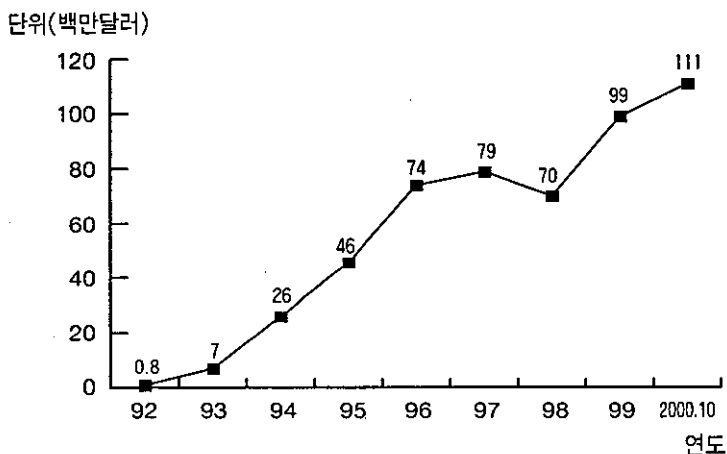
단위(백만달러)



위탁가공교역이 1억달러를 초과하였습니다.

‘92년부터 시작된 위탁가공교역은 ‘94년 2천만달러, ‘96년 7천만 달러 수준에서 2000년 10월말 현재 1억 달러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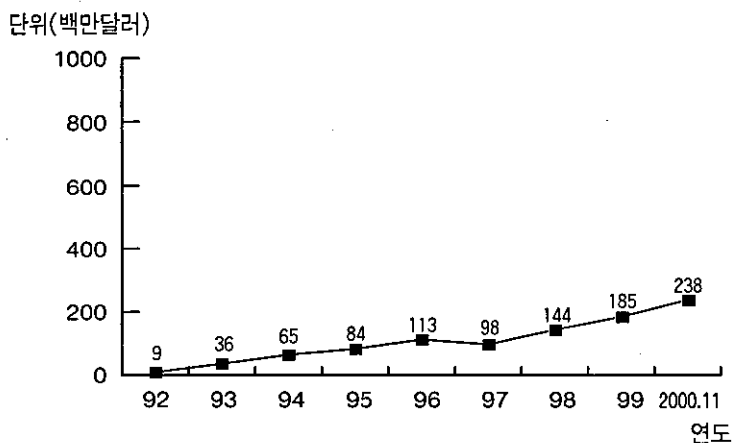
[연도별 위탁가공 교역 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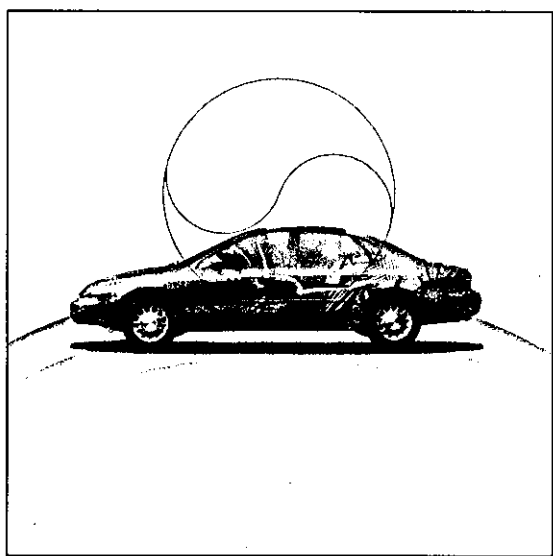


위탁가공교역 참여업체 수와 교역품목도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위탁가공 교역품목은 초창기의 섬유·신발 등 단순가공 품목에서 컬러TV, 자동차배선, 컴퓨터모니터 부품, 카세트테이프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위탁가공 교역 품목 현황]





2000년 남북관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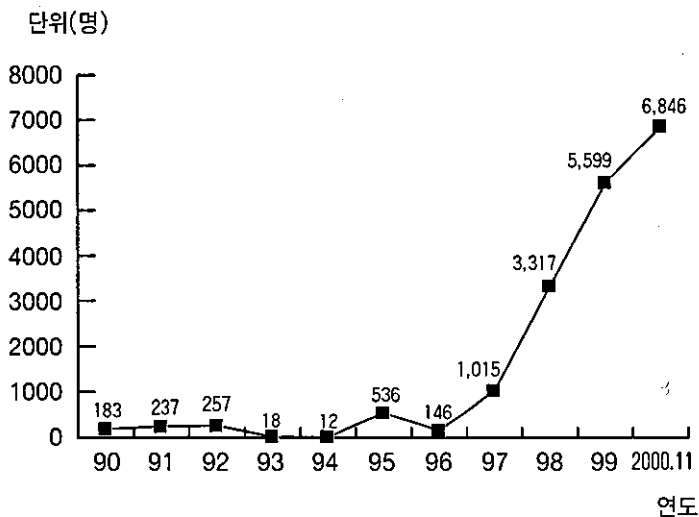
문화예술 교류 등 남북간 인적 왕래가
증강하였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된 2000년 한해동안(11월말 현재) 6,846명이 북한을 방문하였습니다. (금강산 관광객 제외)

이는 1999년 한해 동안 총 5,599명이 방북한 것에 비해 22%가 늘어난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방북추세를 보면, '90년부터 2000년 11월말까지 총 1만8천명이 넘는 인원이 북한을 방문하였는 바 '98년 이후에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도별 방북인원 변화 추이]



2000년 방북자 6,846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금강산 관광사업과 관련된 인원이 2,152명(31%), 경수로 건설 사업과 관련

된 인원이 2,085명(30%), 대북지원 관련 인원이 731명(11%)입니다.

또한, 사회문화 관련 방북자가 646명(10%), 남북회담 관련 방북자가 400명(6%)인바, 이는 작년에 사회문화 관련 방북자 329명, 남북회담 관련 방북자 1명에 비해 급격히 증가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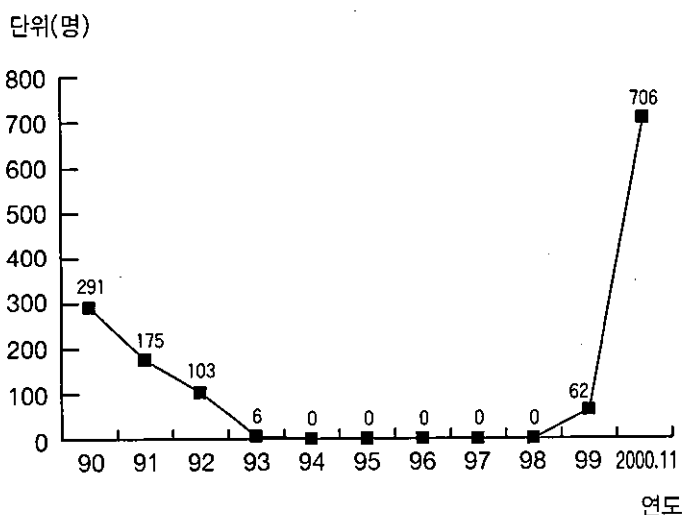
금강산 관광객은 2000년 한해동안(11월말 기준) 총 201,515명이며, '98.11.18 관광 개시 이후 2000.11.30까지 360,143명(월평균 15,658명)입니다.

특히 북측인원의 남쪽 방문이 급증하였습니다.

한편, 북한인원의 남한 방문 현황을 보면, 2000년 한해동안(11.30 현재) 706명이 남한을 방문하여 지난해 62명에 비해 11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90년 이후 2000년 11월말 까지 남측을 방문한 인원은 총 1,343명으로, 방문 인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90년 291명이었으나 '94년부터 '98년까지 남한방문이 없다가 '99년 62명, 2000년에는 706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도별 남한방문 주이]



예술 공연 등 사회문화 분야 교류가 더욱 증대 되었습니다.

2000년 한해 동안에는, 북측의 남한 방문자 706명중 336명 (47.6%)이 문화예술분야 관련 방문으로, 이산가족 분야 방문자 287명, 남북회담 관련 방문자 68명을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서울공연, 『평양교예단 서울공연』, 『남북교향악단 합동연주회』 등이 개최된 데 따른 것입니다.

체육분야에서도 2000년 『금강산국제렐리』, 『통일탁구경기대회』, 『시드니올림픽 개·폐회식 남북한 동시입장』, 『금강산 성화채화』가 성사되었습니다.

언론분야에서는 각종 회담과 1·2차 이산가족상봉 등의 보도 및 취재 외에도, 언론사 사장단이 방북(8월)하여 남북언론교류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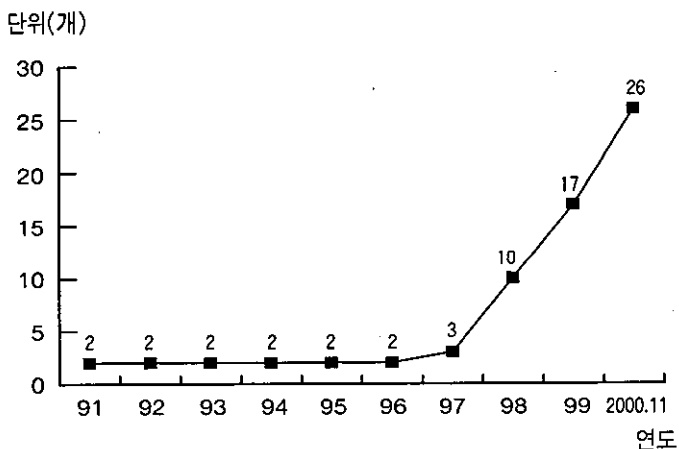
아울러, KBS의 백두산 현지 생방송(9월), SBS의 평양현지 생방송(10월) 및 한겨레신문 등의 방북 취재가 성사되었습니다.

관광분야에서는 우리측 관광단 109명이 백두산을 관광(9월)하였으며,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2001년 3월에 북한의 관광단이 한라산 관광을 위해 남측을 방문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종교분야에서는 부활절 연합예배(4.23), 남북불교도 8.15 동시법회 등 다양한 종교행사가 개최되었으며, 향후 평양신학원 개원 지원 등 각 교단 및 종단별로 교류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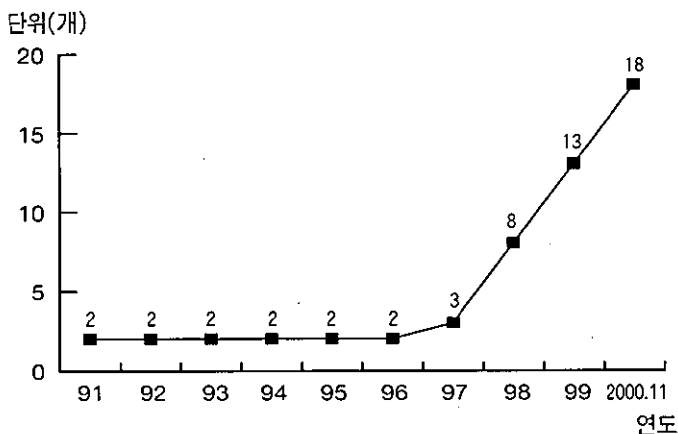
또한 정부는 2000년에 NS21사의 남북합작영화 「아리랑」제작, 한민족문화네트워크연구소의 북한 문화자료정보화 사업 등 9건을 협력사업자로 승인하는등 '91년이래 현재까지 26건을 승인하였습니다.

[연도별 사회문화협력사업자 승인 추이(누계)]



협력사업은 2000년에 (주)네오비전의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주)시스젠의 「조선인포뱅크」 정보에 대한 국내 미러사이트 개설 등 5건이 승인되었으며, '91년 이래 현재까지 18건이 승인되었습니다.

[연도별 사회문화협력사업 승인 추이(누계)]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협력은 특히 남북 주민들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민족동질성을 회복해 나가는데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경제교류협력 못지 않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측은 남북장관급회담에서 교수·대학생·문화계 인사로 구성된 방문단을 시범적으로 교환하자고 제의하였으며, 북한측과 원칙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부문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 나가는 한편, 당국간 협의를 통해 사회문화교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00년 남북관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6.

대북지원의 실질적 효과와

북핵투명성이 높아졌습니다.

인도적 지원은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합리적 방법을 통해 성의껏 지원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우리의 부담능력, 국민여론, 남북관계 개선에의 기여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북지원을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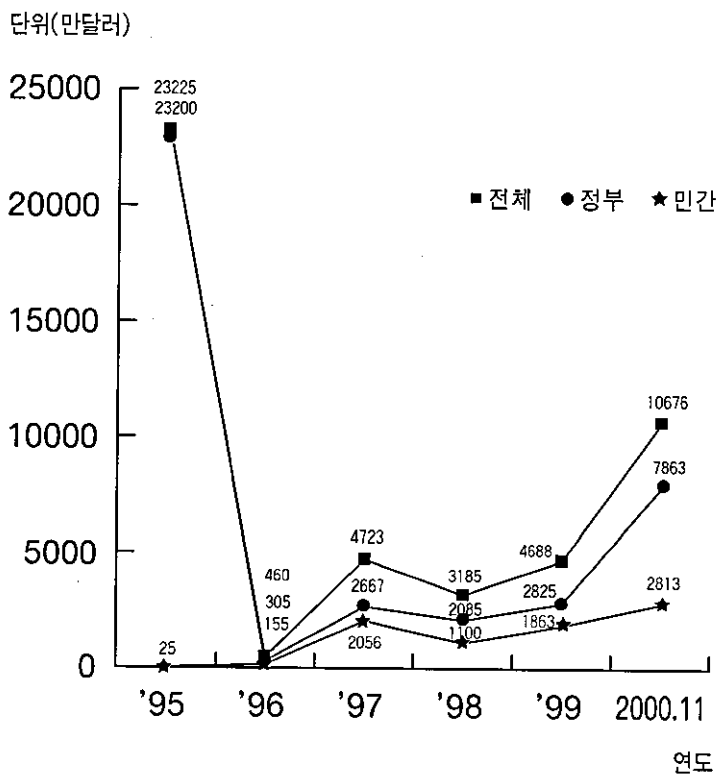
이에 따라, 긴급구호와 병행하여 북한의 농업생산성 향상 및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분야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000년 한해동안 북한에 지원한 규모는 총 1억 676만 달러로 이중 정부 지원이 7,863만 달러, 민간 지원이 2,813만 달러이며, '95년이래 2000년 11월말 현재까지 대북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2000년 11월 말 현재까지 대북지원 현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개발 부분 69%, 보건의료 부분 8%, 일반구호 부분 23%로서 이전 정부의 지원 분야(농업개발 0.7%, 보건의료 0.6%, 일반구호 98.7%)에 비해 농업개발과 보건의료 분야가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민간차원에서는 동포애에 바탕을 둔 민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에서 지원토록 협조하되, 내용면에서는 식량·생필품 위주의 일회성 지원에서 점차 농업개발, 보건·의료분야 등으로 다양화·전문화하고, 지속적인 협력사업 형태로 발전되도록 유도하여 왔습니다.

[연도별 대북지원 주이]



대북식량차관제공시 분배 투명성이 확보되었습니다.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이 식량 부족을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측에 식량지원을 요청해 음에 따라, 정부는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추진하되, 단순 지원이 아닌 차관형태로 제공키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1차 남북경협실무접촉에서 인도·인수절차를 포함한 「식량차관 제공 합의서」를 체결(9.26)한데 이어, 한국 수출입은행-조선무역은행간 차관계약서도 체결(10.4)하였습니다.

차관 조건은 10년 거치 기간을 포함하여 30년 상환, 이자율 연 1%입니다.

정부는 대북식량차관에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여, 태국산 쌀 30만톤, 중국산 옥수수 20만톤을 구매·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북식량차관 제공시 분배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히 노력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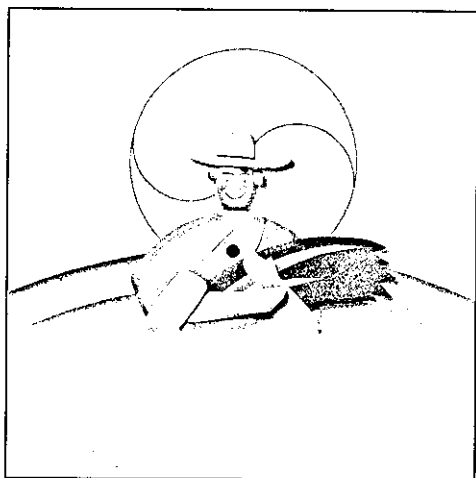
「식량차관 합의서」에 ‘분배 투명성 보장’을 명기하는 한편, 「차관계약서」에 ‘북측이 공급받은 식량은 남북간 화해협력과 신뢰증진을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북측 주민들에게 남측 국민들이 지원하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 쌀 포장에 남측의 지원 물자임을 명기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평양에서 개최된 제2차 남북경협실무접촉(11.8~11)에 참가한 우리측 대표는 북측으로부터 식량 분배내역을 통보 받고, 평양 인근 지역의 분배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측의 식량차관에 대해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한 북측 수석대표는 남측 국민들에게 고맙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식량차관 제공은 남북간의 상부상조 정신을 더 한층
고양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상호 신뢰증진과 화해협력에 기
여하는 중요한 동인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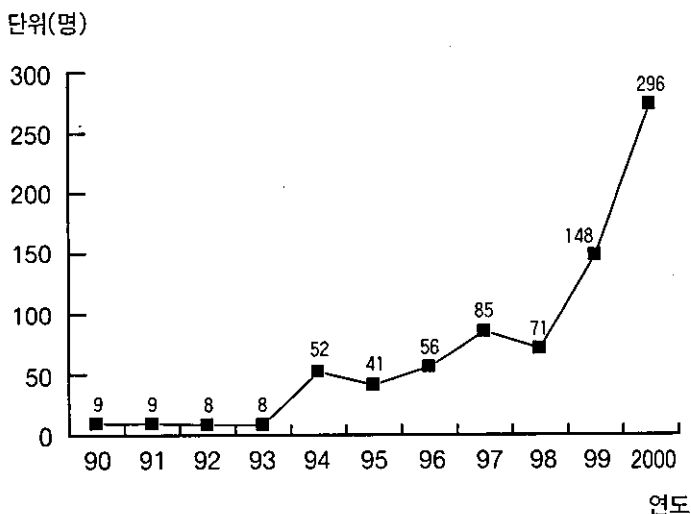
2000년 남북관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7.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2000년 한해동안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들어 온 인원은 296명으로서 1999년 148명, 1998년 71명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입국 추이]



정부는 급격히 늘어난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조기 정착을 위해 각종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중앙-지방-민간을 포괄하는 종합지원체계를 내실화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 능력이 한층 제고되었습니다.

2000 1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2년간 취업보호제를 도입함으로써 신규 취업자가 91명에 이르는 등 취업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교육지원제도 개선 등 자립·자활지원 관련 각종 지원제도도 개선·보완되었습니다.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99.7 개원)의 1년간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응교육 프로그램이 대폭 개편되어, 정서적·심리적 불안감 및 문화적 이질감 해소, 실생활 현장체험 등 사회적응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특히, 1999년에 비해 이론교육이 축소되고, 현장체험·실습교육이 확대되었으며, 심리상담·생활 지도, 운전·전산·조리·봉제 등의 직종에 대한 기초직업훈련과 진로·직업지도가 실시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자활·자립능력이 대폭 증대되었습니다.

한편, 사회편입 이후 지속적 사후지원을 위한 민간과 지방 차원의 지원체계도 강화되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통해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 「민간단체협의회」가 구성(‘99.11)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단체합동의 후원·위로행사 등도 연간 20여회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2000년부터 거주지 보호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 등 정착지원체계가 강화되었고, 효과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거주지·취업·신변보호 등 3개 담당관 합동교육(2000.11)도 실시되었습니다.

2000년 남북관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8.

남편의 근로자가 함께

경수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로 건설 현장은 「남북화합의 장」입니다.

KEDO-한전간 주계약이 발효(2000.2.15)된 이후 북한 금호 지구에서는 경수로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지정지공사는 전체 물량의 약 86%가 완료(2000.11월말 현재)되었으며, 취수방과제, 물양장(物揚場) 등 대규모 토목공사와 도로·통신, 공업용수관 매설 등 기반시설공사, 그리고 근로자 복지시설 공사도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는 우리측 근로자 800여명, 북측 근로자 100명 등 총900여명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수로 건설현장을 남북한간 상호 신뢰 회복과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남북화합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 근로자와의 원만한 접촉과 안전관리를 위한 「방북안내교육」, 「현장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내 질서유지를 위해 금년 3월초부터 우리 인력으로 구성된 「KEDO 질서유지대」 총 35명을 파견·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지 근무자의 사기양양을 위해 소득공제액을 월20만원에서 해외 파견 근로자와 동일 수준인 월15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부-KEDO-북한간 업무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KEDO 및 집행이사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요현안에 대한 대북 협상대책 수립 및 사업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00년 9월에는 우리측 경수로기획단장이 KEDO 집행이사회 의장직을 맡는 한편, 우리 정부는 집행이사국의 일원으로 2000년 KEDO 운영예산의 1/3에 해당하는 385만 달러를 분담 하였습니다.

'95년부터 2000년 7월까지 미국은 KEDO 운영예산 및 중유 비용 등으로 1억 8,660만 달러, 일본 4,172만 달러, EU 8,212만 달러 등을 기여했으며, 우리 나라는 2,461만 달러를 기여했습니다.

한편, KEDO와 북한간에는 「경수로공급협정」체결('95.12) 이후 '특권·면제 및 영사보호' 등 7개 의정서가 체결되어 시행중에 있습니다.

2000년 10월에는 「훈련의정서」에 최종 합의하고 서명·발효 하였으며, 「품질보장 및 보증의정서」도 2000년 7월 제4차 협상에서 대체로 합의된 상태입니다.

아직 타결되지 않은 후속의정서 협상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북측 노무인력 임금문제, 원자력 안전 확보 문제, 해상수송 안전 문제 등도 전문가협의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습니다.

2000년 남북관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9.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의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과정에 진입하였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남북관계는 당국자들이 직접 서로 얼굴을 맞대고 실사구시(實事求是)적 입장에서 상호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상생(相生)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남북관계 발전은 탈냉전의 국제 환경 속에서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 과정의 시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9월 남북은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여 전쟁의 위험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긴요한 문제라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미·일·중·러 등 주변국과 EU를 비롯한 국제사회도, 이러한 남북의 노력에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면서 이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 호응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서방과의 관계개선 등 화해와 공존이라는 세계사적 흐름에 동참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에 북·미 관계와 북·일 관계, EU국가와 북한의 관계가 진전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냉전구조 해체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0년 10월 북한 조명록 특사의 미국방문을 계기로, 북·미는 공동선언을 통해 적대관계 청산과 관계 정상화 의지를 공식 선언하였고,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방북함으로써 양자관계에 일대 전환점이 마련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공조와 중·러 등 주변국들의 협력으로 추진되어오고 있는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를 위한 포괄적 접근이 본격도에 진입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국제무대에서도 남북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9월 시드니 올림픽에서 남북 선수단은 한반도기를 앞세우고 “Korea” 이름으로 공동 입장하였습니다.

시드니 올림픽에서의 남북 공동 입장은 국제스포츠 행사에서 남북이 협력하고 있다는 의미를 넘어, 한반도에 넘치는 화해의 분위기를 전세계인에 알려주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은 2000년 7월 방콕에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각료회의를 계기로 남북외무장관회담을 갖고 대외관계와 국제무대에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회담에서 우리측은 북한의 ADB·APEC 등 국제기구 가입

에 대한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재외공관간에 협의채널을 구축할 것과 외무장관회담의 정례화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북한은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남북한이 힘을 합쳐 한 목소리로 나가자고 하면서 UN총회에서 협력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한편, 재외 공관의 남북한 인사들간 교류도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중국 주재 우리 대사가 이·취임 인사차 북한대사관을 방문하였고, 싱가포르 주재 북한대사는 우리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 방문시 공식환영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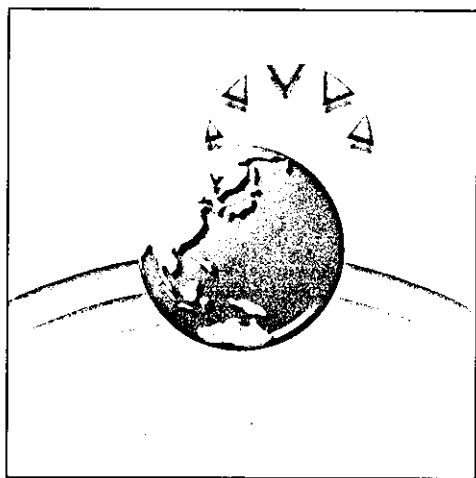
이러한 남북의 우호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10월 제55차 유엔총회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한 결과,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을 환영하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 및 통일」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관련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75년 이후 처음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 3차 아시아유럽회의(ASEM)에서도 남북정상회담 합의와 이행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천명하는 '서울선언'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남북정상회담으로 비롯된 남북화해 분위기는 국제

무대에서의 남북한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 남북관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10.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의견을 대북정책 추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화해·협력과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대북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대북정책은 남북간 실질협력 관계의 확대와 한반도 평화정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북한 측도 우리의 진의를 이해하고 호응해 나오고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발전되고 있는 2000년 현재의 남북관계는 우리 대북정책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회를 비롯하여 여·야를 초월한 국민적 지지를 얻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수시로 국민 여론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대북정책 추진에 반영하였고, 각계 전문가, 여론 주도층 인사와의 의견 수렴활동도 활발히 하였습니다.

또한 대북정책 추진과 남북관계 진전에 맞춰, 언론을 통한 홍보활동과 각종 해설자료 발간·배포, 인터넷·PC통신·E-Mail 등 첨단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화해협력 시대에 맞춰 일선 교육 현장과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통일교육의 방향을 새롭

게 정립하고 다양한 교육자료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왔습니다.

그 동안 정부가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는데 대해 우리 국민들은 세대와 계층을 초월하여 폭넓은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자신감을 갖고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조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남북관계는 이제 화해·협력 시대의 문을 열었을 뿐입니다.

대결과 불신으로 지속된 55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아직도 우리 앞에는 많은 우여곡절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감과 인내심을 갖고 일관성과 신축성을 조화시켜 평화공존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국민들의 지혜와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절실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국민적 합의의 토대 위에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2000년 남북관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발행처 : 통일부 정책2담당관실 (Tel. 722-0390)

www.unikorea.go.kr

기획·디자인 : 케이프로 (Tel. 2285-1100)

인쇄 : 삼일문화사 (Tel. 2277-7122)

